## 대전시 중구, 10월 중구 기관장협의회 개최했다

대전 중구는 30일, 관내 주요 기관과의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중구 기관장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 오원화 대전세무서장, 이윤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장, 서민식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지사장, 전유진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장 등 중구 유관 기관장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중구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보듬카(car)"▲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해 관내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 '20년 숙원' 계룡-논산 동서축 도로망 착공첫삽

충청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충남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주)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충남도는 2030년까지 총 1703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개통되면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시 상월까지 거리는 24㎞에서 9.23㎞로 3분의 1가량 줄어들며, 이동시간도 28분에서 9분으로 감소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KTX) 공주역도 가까워져 계룡시민들이 지금처럼 논산시청이나 대전쪽으로 가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공사는 10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예산부족 문제와 조달청 의뢰방식이라는 제약으로 20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현안을 도가 자체 해결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는 이번 도로 착공을 계기로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계룡·논산의 특장인 국방산업과 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속도'

### 충청남도, 제9~12호 업무협약…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해소 '박차'

충남도는 30일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7개 시군,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호(천안) △제10호(금산·홍성·예산) △제11호(서산·태안) △제12호(보령) 기금 설립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56.2%에 불과했으며, 법정 외 복지비용은 34.7%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1년 1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8호를 설립했다.

올해는 총 64억 원의 기금을 통해 242개 기업, 4013명의 근로자에게 38억 원 규모의 복지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4개의 법인(9~12호)을 추가 설립함으로써 도 전역에 복지 기반을 확산할 방침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12호에는 천안·금산·홍성·예산·서산·태안·보령 등 7개 시군의 140개 중소기업(수혜 노동자 2000명)이 참여하며, 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 정부 지원금 75만 원 등 1인당 총 175만 원씩 출연해 3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16억 원(80만 원씩 2000명)의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화학사고 예방이 곧 안전의 시작!

### 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특별합동점검 협력 지원

충청북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등 취약업소 및 다량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영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사고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화학사고는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 이후 광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과 및 화학물질안전원과 11월 중 간담회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점검에 도·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인력 지원과 도내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녀 도 기후대기과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재난문자·방송 등으로 전파되는 대피 및 행동 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화학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 농식품 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 및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1회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가 오는 31일(금) 개장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일)까지 3일간,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충북 도내 131개 농식품 기업이 참여한다.

이현진 기자

## 꿈돌이 스마트 태그칩 양말에 '쏙'

대전시는 30일 시청 응접실에서 ㈜필로텍(대표 이영민)으로부터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양말' 900켤레(1,200만 원 상당)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영민 ㈜필로텍 대표 등이 참석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 나눴다.

기탁된 '안심양말'은 스마트 태그칩이 내장되어 보호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로 로고를 스캔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제품이다.

대전시는 이번 물품을 대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 중인 치매 어르신 등 실종위험군 대상자에게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이영민 필로텍 대표는 "지역사회에서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제품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간기업의 따뜻한 나눔이 어르신들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시민·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복지안전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30일 지역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기술 교류를 위한'제8회 바이오테크코리아'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바이오기업 투자·상장 성공사례(큐리오시스 백가람 이사)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방안(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김영호 심사역) 발표를 진행했다.

이채봉 기자

## 국비확보 상황실 운영해 내년도 예산 시동

###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 현장상황실 현판식 개최…예산확보 최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0일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판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특례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기획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은 내년 2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조기 추진에 대한 국회의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세종과 대전, 충북을 연결하는 중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아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 오는 2027년까지 지방4대협의체를 이전하고,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사적 활용을 위한 관람환경 개선, 학술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조성 사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제천횡단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채봉 기자